

‘우연’이 주는 인간다움

교수칼럼



고봉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영화 <브로큰 플라워(2005)>는 한 남자가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는 이야기이다. 젊은 시절 바람둥이였던 남자에게 그가 모르는 아들이 있다는 것. 남자는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연인들을 찾아 나서는데, 그 여행에서 정작 그가 마주하게 된 것은 자신의 과거이다. 인생은 오직 ‘직진’이라고 믿으며 사는 남자에게 삶을 성찰할 계

기를 주는 것, 이것이 ‘우연’의 힘이라는 게 영화의 메시지이다.

현대사회는 삶에서 우연적 요소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검색’ 문화가 대표적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검색을 반복 한다. 버스와 지하철의 도착시간을 검색하고, 소문난 음식점의 메뉴와 평점을 검색하며, 강수 확률과 미세먼지 농도 같은 생활정보를 검색한다. 나는 검색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은 현대의 슬로건이다. ‘검색’은 모든 것에 즉각 응답한다. 체형이나 취향에 맞는 헤어스타일, 패션을 결정해주고, 자신의 스펙과 희망조건을 입력하면 적당한 결혼상대를 검색해주는 서비스는 이제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생체·유전



영화 <브로큰 플라워>는 우연이 갖는 힘을 이야기한다.

정보를 입력하면 매 끼니 식단, 운동 종류, 수면시간 등을 알려주는 최적화된 건강 서비스가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

우리의 삶에서 ‘우연’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우선 취향에 맞지 않는 영화를 보거나 체질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먹어선 안 되는 음식을 먹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예측 또는 계산 범위를 벗어난 사건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검색’은 우리가 여행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우연적 사건을 손쉽게 해결해줌으로써 심리적, 물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검색’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음식점과 싸고 편안한 숙소를 찾을 수 있고,

바가지요금이나 범죄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검색’ 없이 떠나는 여행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검색’이 편리함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검색’이 주는 편리함은 우연을 배제하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우연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 인식, 행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과 경험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언제나 동시에 발생한다. 인터넷은 내 취향에 적합한 음악을 추천하면서 동시에 타 장르의 음악을 접할 가능성을 제거한다. 결국 취향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에는 취향에 맞지 않는 ‘외부’를 경험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셈이

다. 우리는 늘 비슷한 음악을 듣고, 비슷한 음식을 먹고, 똑같은 풍경을 보면서 출퇴근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까? 지하철이 멈춰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해야 할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경을 경험하게 된다. 검색으로 맛집을 찾아갔는데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그 가게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된다. ‘우연’은 다른 세계를 ‘강제로’ 경험하게 만든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쏟아내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우연’으로 인해 고생한 경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어쩌면 진짜 여행은 고생에 있는 것이 아닐까. 우연이 불편함을 초래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검색’에 의지하는 한 타인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이고, 익숙한 세계의 ‘바깥’을 경험할 가능성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스마트폰이 제시하는 것이 ‘검색 결과’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는 것, 검색 주체나 검색 지역에 따라 필터링된 부분적인 내용만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검색’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는 최근 검색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 자주 쓰는 단어 따위에 근거해 나의 인식과 판단을 선(先)규정한다. 한 철학자는 이러한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필연성의 세계를 ‘동물화하는 세계’라고 주장했다.

‘동물화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구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필연’을 부정하고 삶을 ‘우연’에 맡기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연’과 ‘필연’의 균형이 인간다움을 규정함을 이해하는 것, 그리하여 아마존이나 유튜브의 추천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우연’의 배제는 우리에게서 인간다움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가끔은 ‘검색’에 의존하지 않는 판단이나 선택을 할 필요도 있다. 가령 에브리타임에서 ‘검색’하지 않고 수강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계획’이나 ‘검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다.

교수사회의 변화를 위해 - ①

강사법 시행과 총장 선출



김종인(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지난 여름 한국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한일관계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문제에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던가 있지만 왜곡된 현실을 반영하는 두 가지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 대학의 시간강사법 시행과 경희대학교 총장 선출 문제다. 나는 시간강사가 아니어서 강사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직접 겪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전임교수도 아니어서 총장 선출 문제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객원교수 신분인 나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문제에 철저히 제3자의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사회의 일원으로, 경희대학교의 일원으로 나는 이 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8년을 끌어오던 강사법이 이번에 시행됐다. 시행 방식을 두고 정부 당국과 시간강사들이 합의까지 이뤘지만, 시행 결과는 강사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아파트 10채 값도 안 되는 돈으로 3만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위선이다. 공재라는 형식 때문에 시간강사들은 여름 방학 내내 논문 한 편 쓸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가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각종 증빙 서류를 갖춰 이곳 저곳에 지원서를 내야 했다. 공

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에서 강의를 얻은 사람은 극히 미미한 숫자로 보인다. 대부분 기준에 강의 하던 곳에서 같은 강의를 얻거나 탈락하거나이다. 임용 절차만 요란하고, 결과는 더 좋지 않다. 대학이 강의 수를 줄이고, 전임교수의 시수를 늘려 시간강사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시간강사들은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할 태세다. 어떤 식이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낼 수 있는 곳은 정부밖에 없지만, 정부도 시간강사들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일차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여해야 되는데, 냉정히 보면 과잉 공급된 박사를 위한 재정 투입은 사회적 낭비이고 불공정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픈정부에만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타당한 일도 아니다. 국가가 문제를 방기한 것은 사실이나 주된 책임은 수많은 박사를 마구잡이로 양산한 대학사회, 특히 전임교수들에게 있다. 윤리적으로는 그들에게 해결책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옳다. 전임교수 집단이야 말로 시간강사 문제에 책임이 큰 집단이다.

사회적 집단은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지녀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권리와 권리만 행사하려 하고 책임지지는 않으려고 한다. 특권화한 집단들은 사회의 장애물이 된다. 오늘날 대학의 전임교수 집단은 특권화 된 집단의 전형이다.

경희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총장 선출 방식을 두고 학내 여러 집단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여 한 학기 넘게 총장직무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합의가 안 된 주요인은 학내 집단 간 총장 선출을 위한 투표 반영 비율인데, 전임교수들이 자신들의 뜻으로 70% 가량을 주장한다고 한다. 사회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전임교수들의 의식에 대해 말하고 싶다. 경희대학교 전임 교수들에게 묻고 싶다. 총장 선출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기 전에 대학의 오랜 문제이자 동료이기도 한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무언가 해결책을 도모해 본 적이 있는가?

권리는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대표적인 두 집단이 있다. 하나는 언론인 집단이고 또 하나는 대학의 전임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 집단이다. 과거에 이 두 집단은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인 것처럼 행동했다. 사람들 역시 많은 것들이 쉬이 드러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 두 집단이 그렇게 행동해도 될 만한 개인적 혹은 집

단적 도덕성을 갖추었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깨발려지는 오늘날에는 그렇지가 않다. 언론인의 맨얼굴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람들은 언론인을 기레기라고 부른다. 교수의 민낯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교수의 망언이 술하게 드러나고, 성추문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들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조교에 대한 갑질은 이미 많이 알려졌다.

시대는 변했다. 교수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사회의 등불이자 지성으로 비유되는 그런 신성한 책무가 아니다. 시간강사들은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강사료를 받는데 자신들은 고액 연봉을 받는 데 대한 현실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이 없다. 사회에 자신들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시대착오적 권리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교수들에게도 어떤 경멸적 별칭이 생기지 않겠는가?

〈연재칼럼 목차〉

1. 강사법 시행과 총장 선출
2. 대학의 주인은 재단이나 교수가 아닌 사회
3. 대학교수들의 구사대적 권리 행사
4. 교수 길드의 전근대적 폐쇄성, 대학교육 낙후
5. 교수 길드의 해체를 위한 국가공인박사제도
6. 교수들의 관습적 권한을 폐기해야 한다